

# 수소경제 앞당긴다...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

정부, 수소제조 천연가스값 인하  
민관 상용차 수소충전소도 구축  
2030년 RPS 수소비중 26% 전망

정부가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2022년 도입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본격 구축토록 하는 등 수소경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수소경제 확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를 체계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이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 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 받았다.

이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

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HPS 도입 이후 RPS 비율을 조정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HPS비율이 정해지는 것과 그때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바꿔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내년 1분기까지 시설물별

## 수소경제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10월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 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 기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 부과(수소법 개정)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 기대 (단위: 원/kg)  
제조비용: 3~4천원, 현행 7~8천원  
충전소 판매가격: 현행 7~8천원, 2030년 이전까지 6천원대 이하 목표  
전량 2.4~3천원
  - 정유·가스사,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 동참 (코하이젠 설립 추진)**  
코하이젠(Kohygen):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
  - 4개 지자체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및 '수소도시법' 제정 추진**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 내년 수소관련 예산 대폭 확대**  
7,977억원, 약 35% ↑ (정부안·국비 기준), '탄소경제' → '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반 마련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조원태 '대한항공에 자기색 입히기' 나서

(한진그룹 회장)

>> 1면 '뉴메트로 5주년'서 계속

실제 구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장사업은 최근 뚜렷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LG화학 전지사업부는 올해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도 1위를 지켜냈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12일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 회장은 그룹 전체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경영 비전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직면했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LG전자는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선전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1976년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에 '자기 색 입히기'에 나섰다. 한진그룹 회장 취임 2개월 뒤인 지난해 6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로 공식 데뷔한 조 회장은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버리겠다"고 말하며 회사 전체의 체질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대한항공은 카카오와 MOU를 맺는 등 기존의 올드한 이미지 탈피에 집중했으며 IT분야에서 뼈가 굵은 인재를 전면 배치하기도 했다. 또한 KCGI와 반도그룹 등 외부세력과 손잡은 누나 조현아 씨와 경영권 분쟁에 직면했지만 전략적 파트너인 델타항공을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총수 자리를 지켰다.

1968년생인 이재용 부회장은 선친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며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 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변경 지정하면서 'JY 시대'를 열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비상 경영과 코로나19 등 경영 불확실성 속에도 과감한 투자와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서는 등 흔들림 없는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찾는 한편 안으로는 자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이 부회장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조흥제 효성 창업주의 손자이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1968년생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공식 취임하며 3세 경영에 나섰다.

조 회장은 지난해 탄소소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올해 4월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미래 수소 경제 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총수로서 사내에서는 입지를 굳혔다는 평을 받지만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외부 변수를 제외하면 회장에 오른 뒤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지배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인사에서 사장 승진과 함께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에 선임되며 3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력 약화해선 안돼"

與, 4대 그룹 싱크탱크 만나  
"경제계·학계 등 의견 청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재계 싱크탱크가 15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논의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전날(14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관련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LG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 4대 그룹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 형태로 진행된 간담회에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양측은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과 기업 측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홍 원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경제 3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활력을 약화해선 안 된다는 데 함께 공감했다"며 "(공정경제 3법)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뒤 당 정책위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재계 측과 협상하거나 절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밖에 홍 원장은 향후 공정경제 3법 논의 차원에서 경제계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나 학계,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 내 (공정경제) 3법 입법이 사회적 합의 속에 잘 마무리 되도록 경제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간담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순항

중기벤처부, 4.9만명에 추가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 가운

데 추석 전 100만원씩을 받은 4만9000명에게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1곳당 돌아가는 총 지급액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다.

중기부는 이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금액은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38만명에 대해선 16일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추가 확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도 지난 13일 문자를 발송, 추가 지원했다.

/김승훈 기자 bada@